

【서평】

## 전환사회 엘리트 변동의 위상학

불순한 동맹과 도덕적 자본

- 한독사회학회 엮음, 『독일통일과 동독권력 엘리트: 남북통일への 함의』(파주: 한울 아카데미, 2011)
- 질 에알, 이반 젤레니, 엘리노어 타운슬리 저 · 임현진, 정일준, 정영철 역,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서울: 시유시, 2007)

홍민(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 I. 통일사회, 엘리트 변동의 사회동학

한반도 통일은 하나의 ‘거대한 전환’일 수밖에 없다. 두 이질적인 체제가 하나의 체제로 수렴되거나 새로운 통일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통일방식에 따라 다양한 통일사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으나, 단순화하면 북한에게 통일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의 역사적 ‘전환’을 의미할 수 있다. 결국 통일은 분단사회에서 통일사회로의 ‘전환’, 이질적인 양측의 체제 논리가 하나의 체제 논리로 수렴되는 ‘체제 전환’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은 통합과 체제 전환이라는 동시적이며 이중적인 사회동학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한 전환은 엘리트들의 거대한 변동 역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간의 한반도 통일이나 통합 논의에서 이런 엘리트 변동은 그다지 심도 있는 학술적·대중적 관심을 받아오지 못했다. 아마도 그것은 승자의 관점—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에서 낙관적 결론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통일이 지나치게 당위론과 목적론에 경도된 나머지 그 구체적 현실 문제를 애써 낙관적인 모호성으로 남겨두고 싶은 심리의 반영일 수 있다. 물론 분단극복을 가로막는 구조화된 분단체제의 완고함과 생명력이 아직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통일 이후의 엘리트 변동까지 고민을 넓힌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오히려 이런 논의들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통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역기능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엘리트 변동은 통일사회의 사회적 성격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척도로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단순히 어느 일방의 승리 또는 패배로 환원되지 않는 복잡다기한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사회의 ‘정치적 장(場)’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체제질서에 적응하고 변신을 해야 하는 생존의 장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오로지 사회적 패배만이 있는 침묵과 도태의 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정치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기득권을 쟁취해야 하는 기회와 쟁투의 장일 수 있다. 여기에 통일사회에서 나타날 정치경제적·사회문화적 갈등은 ‘정치적 쟁투’의 자양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역동성은 이미 통일독일과 구동유럽 전환국가에서 나타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곧 통일사회의 엘리트 변동이 통일 이후 단기간에 마무리되는 외과적 수술의 한 영역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전개될 사회동학의 중요한 차원으로 인식될 영역이란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사회 또는 전환사회의 엘리트 변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통일과 관련해

서 필요한 고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좀 더 넓은 안목에서 본다면 그것은 엘리트 변동의 사회동학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 공간의 내적 성격과 동학을 되짚어보고 성찰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엘리트 변동은 옳고 그름이나 승자와 패자와 같은 이분법으로 설명될 영역이 아니라 ‘사회동학’ 차원의 문제이고 사회과학적 도전이 필요한 주제인 것이다.

## II. 전환사회의 두 풍경: ‘브레누스의 검’과 불순한 동맹

공산주의 이전, 공산주의, 탈공산주의, 그 안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과연 바뀌었는가? 사회구조가 바뀌고 사회조직 원리가 변화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지위에도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과연 어제의 지배자가 오늘의 피지배자로 전락하고, 어제의 피지배자가 권력자의 지위로 상승했는가? 누가 탈공산사회의 새로운 지배엘리트로 또는 지배계급으로 떠오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실증적인 답변을 주는 연구는 사실상 흔치 않다. 대체로 특정 국가에서 가시화된 양태를 단순화하여 가설적 명제를 만들기도 하지만, 실증적으로 구 권력엘리트들의 생애 이력을 추적하며 실증적 연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전환사회의 엘리트 변동의 양태는 단순화하면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전환과정에서 구 권력엘리트들의 자연적 도태와 정의로운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패자에게는 비참할 뿐이다”라는 경구처럼 ‘브레누스의 검(The sword of Brennus)’<sup>1)</sup>이 구 권력엘리트들에게 작동

1) 브레누스는 골족의 지도자로 기원전 387년 로마를 침공하여 강화를 조건으로 100파운드의 금을 요구했다. 로마 측에서 금의 무게를 달기 위한 저울의 문제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즉 기득권 상실과 사회적 소명의 사례와 양태에 주목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정치자본론에 입각해 구 권력엘리트들이 ‘정치자본의 경제적 부로의 전환’이라는 성공적 ‘변신’을 한 점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구 권력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와 재생산의 사례에 주목하는 것이다. 마지막은 구 권력엘리트들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술 및 문화 엘리트들이 전환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엘리트와 ‘불순한 동맹’을 형성하며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두 권의 책—『독일 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와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은 바로 독일 및 동유럽 전환사회에서 나타났던 ‘정의로운 처벌’과 엘리트 재편을 둘러싼 ‘동맹’의 형성을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정치자본주의로 대표되는 구 권력엘리트들의 성공적 ‘변신’의 사례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통일독일 및 동유럽에서 나타난 다양한 엘리트 변동의 사례들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연구가 동일한 연구대상과 사례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하나는 독일통일만을 다루고 있고, 다른 하나는 동유럽 국가들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전환 국가들의 엘리트 변동이 갖는 역동성과 단계적 진화를 긴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전환사회 사례 연구 및 비교연구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책이 주장하는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들 전환국가의 사례들은 어느 하나의 가설이나 현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패자와 승자로 분리되는 ‘브레누스의 검’이 예리

---

가 있다고 항변하자 그는 자신의 검으로 저울을 내리치면서 “패자에게는 비참함 뿐이다(vae victis)”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게 작동하지도 않았고, 정치자본에 입각한 기득권 재생산의 성공적 ‘변신’ 역시도 일반적인 현상으로 모든 전환국가에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각 국가가 처한 과거 유산과 사회구조, 그리고 전환 당시의 초기조건, 전환 방식 등이 엘리트 변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고 그러한 변수에 따라 다양한 엘리트 재편의 양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의로운 처벌’을 명분으로 보수적인 구체제의 정치엘리트들이 정치세력화를 시도하고 구체제의 권력엘리트 자녀들이 정치엘리트로 새롭게 정치무대에 등장하는가 하면, 아직 등장하지 못한 자산부르주아지를 대신해 구체제의 문화교양 부르주아지들이 자본가로 적극적인 변신을 하는 등 전환국가의 엘리트 변동은 매우 다양한 사례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우선 통일독일 엘리트 변동에 주목하는 『독일통일과 동독 권력 엘리트』에서는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엘리트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핵심 엘리트 계층의 획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본다. 구동독 지역에서 기존 동독 엘리트들이 서독 출신의 엘리트들로 대폭 교체된 것이다. 동유럽에서는 기존 엘리트 집단이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경제적 권력으로 이동한 반면, 통일 이후의 구동독 지역에서는 경제적 권력으로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독일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 엘리트의 변화가 ‘특이한 경로’를 걷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특이한 경로’는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게 관찰되었던 체제저항 엘리트들이 변화를 주도하여 통일과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엘리트 계층을 형성하는 현상이 동독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권력엘리트’의 몰락 역시 다른 동구권 국가에서는 기존 엘리트 집단이 정치적 권력에서 경제적 권력으로 이동한 반면,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에서는 그들에 의한 경제적 권력으로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구 권력엘리트의 ‘몰락’이 진정한 몰락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본다. 자유선거를 통해 최초로 구성된 동독 의회에서는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기득권을 박탈했는데, 통일된 독일연방회의에서는 구동독 권력엘리트들에 대한 기득권을 다시 부활시켜 이들에게 100만 유로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나, 동독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759명의 동독인과 245명의 서독인이 재판을 받았으나 금고형 또는 형 집행 정지로 대부분 석방되었고 징역형이 선고된 사람은 50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벌의 약화와 기득권 부활의 조짐은 오히려 동독출신 주민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을 이용하여 ‘정의로운 처벌’을 요구하도록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구동독 정치세력의 새로운 결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는 중동부 유럽 전환국가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기존의 ‘정치자본론’의 가설과 주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정치자본주의의 가설은 공산주의 노멘클라투라가 전환과정에서 과거 지니고 있던 정치자본을 토대로 경제적 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제자본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환사회에서 새로운 대부르주아지로 그들이 변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스타니스키스(Staniszkis)와 한키스(Hankiss)가 그런 주장의 대표적 학자이다. 그러나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의 저자들은 이런 현상은 현실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소련이나 중국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며 대부분의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본다.

저자들은 이전의 정치자본, 즉 공산 당원이었다는 사실은 노멘클라투라 구성원의 생존기회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이전의 노멘클라투라 구성원의 대다수가 이행과정에서 패배자가 되었다고 본다. 정치자본을 경제적인 부로 전환시키는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오히려 전환사회에서 대성공을 거둔 자들은 이전의 공산주의 지배층 중에서도 특히 기술관료 분파였다고 본다. 이런 설명과 분석은 구국가사회주의 국가들의 현주소를 공산화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추적할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조사를 통해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을 비교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여기서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란 이들 중동부 유럽 국가들에서 정치자본을 통한 경제자본화에 성공한 권력엘리트가 미약하기 때문에 시장기제가 도입되기 전에 사유재산 소유계급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엘리트와 기술관료에 의해 특정한 신이행전략이 채택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 초점을 두는 한편 그 이행을 주도하는 엘리트는 누구인가를 묻는다. 그런 차원에 이 책은 세 가지 질문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붕괴나 재생산을 분석하기보다, 사회제도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체의 붕괴나 자기 궤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가는지에 관심을 둔다. 둘째, 중부 유럽 안에서 다양한 소유 유형에 경험적인 연구의 초점을 두기보다, 자산계급 부재가 공통적인 특징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의 자본주의 형태에 주목한다. 셋째, 비교방법상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이전 또는 공산주의 시절과 대비시키거나 다른 지역의 자본주의 형태와 비교하면서 현대 중부 유럽을 동질적인 범주로 묶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 주목할 점은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이론들을 엘리트 변동과 사회구조의 변화란 차원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르디외가 개념화한 정치자본, 문화자본, 경제자본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여 공산화 이전, 공산주의, 탈공산주의를 상이한 유형의 자본이 지배하는 세 가지 상이한 계층화체제들로 개념 짓는다. 저자들에 따르면, 탈공산주의로의 이행은 사회주의 위계질서로부터 자본주의 계급계층화로의 전환이며, 문화자본이 지배하는, 역사적으로 그 예

를 찾아보기 힘든 계층화체제라는 것이다. 이 계층화 체제는 탈공산주의 자본주의는 지위, 권력, 특권을 획득하려는 엘리트에게 문화자본(교육, 기술, 자격증)이 경제자본(재산소유권) 또는 사회자본(사회연줄망)보다 중요한 체제라는 것이다. 구체제에서부터 문화적 교양을 갖춘 엘리트들이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주체라고 보는 것이다.

한편 저자들은 이들 문화자본을 지닌 엘리트들이 전화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데는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여기서 ‘불순한 동맹’의 정치 역학(dynamics)이 등장한다. 불순한 동맹의 관점은 진정한 승자는 문화자본을 지닌 이전의 공산주의 기술관료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혼자서는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발견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새로운 정치관료 및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 엘리트와 함께 주류 권력 블록을 창출해야만 했는데, 이 두 집단은 대체로 이전의 반체제 지식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공산주의 몰락 직후, 새로운 정치 관료와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 엘리트는 이전의 공산주의 기술관료를 권력에서 축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지식인 엘리트 분파 중 누구도 혼자서는 통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탈공산주의 이후 두 번째 치러지는 선거에서 이전의 반체제 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치 관료의 지위에서 탈락했으며, 구공산당 실용주의자들이 새로운 정치엘리트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들의 ‘불순한 동맹’을 보여주는 예라는 것이다.

이들 두 책은 전환국가의 엘리트 변동이 특정한 가설적 일반화에 전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앞서 강조했듯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구조와 유산, 전환 당시의 초기조건, 전환의 방식에 따라 전환사회의 엘리트 변동은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환사회의 국면을 자신의 이해관계로 새롭게 전유하는



엘리트들의 생존전략이란 차원에서 이들 엘리트의 변동은 전환사회의 중요한 사회동학의 한 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생존전략이 과거로부터 전승되거나 습득된 개인적 ‘자본들’과 새로운 사회가 요구하는 ‘자본들’ 사이의 역학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의문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환사회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자본’ 또는 정치적 자원은 어떻게 자본화가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일까? 또는 물려받고 습득된 ‘문화자본’ 또는 ‘정치자본’만으로 가능한 것일까? 자본화는 결코 개인적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전환사회의 대중 심리와 새로운 도덕적 기대와의 긴장 속에서 가능한 것은 아닐까? 아무리 문화자본 또는 정치자본이 많더라도 그것이 전환사회 속에서 도덕적으로 승인받거나 지지받지 못하는 것이라면 과연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Ⅲ. 엘리트 변동의 사회적 드라마: 도덕적 알리바이와 도덕자본

이 두 책에 대해 공통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우선, 전환사회의 엘리트 변동을 지나치게 내적 동인과 배경만으로 한정해서 보는 폐쇄적 분석이다. 특히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는 자산 부르주아 없이 어떻게 자본주의가 경제체제로 등장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자본주의와 자본가가 없었다는 것은 국내적 조건을 제한적으로 보았을 때는 일견 그렇게 보일 수 있으나, 이행경로를 강제하는

대외적인 국제적 흐름의 영향력과 이 대외적 요소들과 국내 엘리트들의 생존전략과의 상호관계는 분석에서 생략되어 있다. 외부자본의 역할이나 국내 엘리트들과의 관계, 국제정치의 동학이 개입하는 힘이 간과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체제전환 이후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이행 도식을 받아들여야만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사회의 전제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보다 빠르게 이해관계로 전환시킨 사람들, 그러한 전환사회와 세계적 흐름을 보다 빨리 읽고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다. 단순히 문화교양 부르주아지의 역사적 ‘사명’ 정도로 이들을 전환사회의 주역으로 삼기에는 무엇인가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트 변동을 국내적 사회동학 차원에서만 보는 한계가 이 두 책에는 있다. 국내적 엘리트 변동은 어떤 단일 세력의 주도성보다는 각기 다양한 세력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내적 엘리트 변동에 개입하는 다양한 국제적 수준의 영향이 이 연구에서는 간과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일상화된 침투가 이미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국내 엘리트들은 그러한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이다. 또한 국내를 벗어나 국제적인 정치경제 세력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의 형성이 이들 엘리트 변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 책에서는 그러한 국내 엘리트 변동과 국제적 변수들의 상호관계와 동학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의 경우 자본주의의 성립조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것이 목

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자본주의의 성립조건(전제조건)을 이야기 하는 것과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자본주의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립하는 기본적인 조건, 요소들에 대한 탐색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알아야만 다양성을 판별해 낼 수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과 재생산은 뒷전으로 밀리고 비교와 다양성에만 매몰되다보니 정작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보다는 자본주의의 여러 유형만 나열적으로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제조건에는 별 관심이 없고 다양성을 강조하겠다는 태도는 본질 없는 양태(모양)의 묘사에 그칠 수 있는 학문적으로 위험한 발상이 되지 않을까 싶다.

둘째, 왜 어느 사회에서는 정치자본을 가졌던 엘리트들이 지속적인 지배계급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느 사회에서는 배제되거나 지배계급의 무대에서 사라졌을까? 물론 전환의 방식이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또한 그것이 단순한 체제전환이 아니라 분단국가의 통일이라면 더욱 이야기는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제의 ‘정치자본’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기득권 유지의 지렛대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환국가에서 과거 정치자본은 ‘정의로운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정치적 ‘주홍글씨’에 가까웠다. 정치자본은 약인 듯 보이지만 독이 될 수 있는 ‘파르마콘(pharmakon)’, 또는 생존에 있어서는 양날의 칼이었다.

이것이 양날의 칼인 이유는 정치자본은 전환사회에서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때문일 것이다. ‘전환’ 또는 ‘통일’ 국면 또는 과정은 가학적이거나 피학적인 대중심리 모두를 보여주는 무대이기도 하다. 그러한 가학성과 피학성은 대체로 ‘정의로운 처벌’이란 이름으로 등장한다.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자본을 통해 군림했던 관료들은 인민들에 대한 도덕적 지배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한 사람들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전환 국면의 대중적 도덕 심리는 정치자본의 효용성을 좌우하는 중요

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의 결정적 문제는 부르디외가 개념화한 ‘자본들’에 대한 이해 부족과 그것의 활용에서 보여주는 불명확성이다. 저자들은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자본이 결정적”이라고 본다. 또한 공산주의 이전의 경제에서는 사회자본이 더 중요했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가 지배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자본, 말하자면 정치자본이 지배적인 형태”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정의는 부르디외가 의도한 개념화와 그 활용에 대한 잘못된 활용이며 과도한 단순화와 비약의 오류를 담고 있다.

우선 자본주의에서는 경제자본이 결정적이고 공산주의에서는 정치자본이 지배적인 형태라는 전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자본은 물론 중요하지만, 경제자본이 독자적이고 계급재생산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데 부르디외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왔던 학자란 점이다. 삶의 전략에서 경제자본은 하나의 기초가 될 수는 있어도 여러 변형적 자본들과 결합되어야만 지배적인 자본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는 경제자본 그 자체를 도덕적으로 포장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권력은 결코 경제자본으로 전적으로 환원 불가능한 ‘무엇’이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상징자본’으로 추인되는 것이며, 그것은 도덕적 위상학에 해당한다.

한편으로 정치자본을 사회자본의 일종으로 보는 것도 모호하다. 어느 사회를 하나의 자본이 우월한 사회로 보는 것은 그 사회의 다양한 삶의 전략들을 왜곡할 소지가 높다. 또한 저자들은 마치 세 가지 자본들을 통해 사회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자본 그 자체로는 사회구조를 알 수 없다. 그 자본들이 교환되는 형식과 내용, 장(場)의 동학(사회적 공간)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 책은 하나의 주도적인 자본이 한 사회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단순화하고 그것을 ‘구조’라 칭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회 내부에서 다양한 자본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고 중첩되면서 교환의 동기와 형식을 만들고 그것의 지속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략되어 있다. 연속선상에서 사회변동에 직면하여 자본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인지 포트폴리오의 조정으로 인한 결과로서 사회변동이 오는 것인지 혼동스런 설명의 지점이 존재한다.

셋째, 『자본가 없는 자본주의』는 “계급 간 투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계급 내 투쟁 또는 더욱 엄밀히 말하여 엘리트 간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엘리트 계급 내 투쟁으로 한정지은 것 자체가 이 연구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일 수 있다. 계급 내 투쟁은 계급간 관계(투쟁구도, 상호 인식구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가령 엘리트 계급 내 특정 집단에 대해 다른 계급이 갖는 인식, 즉 도덕적 평가나 계급적 인식은 이들의 전환 과정에서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출신성분은 정치적 지위나 권력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과 함께 궁극적으로 그 사회에서의 도덕적 위상에 해당한다. 과거 지주나 부잣집 출신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도덕적으로 비난받거나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실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환 이후 과거 정치자본을 통해 인민 위에 군림했던 사람들은 전환사회에서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과거의 모든 정치적 성공과 관련된 이념적·도덕적 증표들은 새 시대에는 낙오자의 증표가 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두 책을 살펴보고 첨언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회적인 것은 도덕을 본질로 한다는 점이다. 국내는 물론 국제정치 역시 도덕적 정당성이 중요한 정치적 내포와 외연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도덕’은 원래 있는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구성될 뿐이다. 시대의 권력의 부조리극은 바로 이런 도덕의 평가, 대중의 도덕적 심성이 변화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권력의 획득은 바로 변화하는 ‘시대의 도덕’에 맞는 ‘도덕

자본'을 얼마나 축적하고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바로 권력엘리트 변동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그들의 위상 변화의 드러난 양태만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했던 시대의 도덕적 심성이다. 그것에 적응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엘리트들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바로 엘리트 변동은 끊임없이 그러한 도덕적 레버리지(지렛대)를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에 판가름 나는 게임인 것이다.

#### IV.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앞서 얘기했듯 통일은 외과적인 수술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학적 성찰과 사회과학적 엄밀함이 필요한 영역이다. 지금도 자주 북한체제에 대한 분석은 '수령제'라는 완고한 틀에 갇혀 분석되는 경우가 많다. 폐쇄적 수령제에 갇힌 사람들로서 이들 엘리트들을 단일한 실체로 파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북한 엘리트들의 내부 역동성이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북한 인민들이 지닌 도덕적 에토스, 생계윤리의 심성을 읽으려는 노력이 많지 않다. 그들은 지배에 대한 저항 또는 순응으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생존전략과 역할연출을 수행하는 사회적 드라마의 주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은 누가 전환과 통일의 주체일까라는 문제와 함께 통일 및 전환 국면에서 상황적 윤리가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던져준다. 통일 및 전환 국면에서 인민들의 도덕적 심성과 '정의로운 처벌'의 심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환과 통일의 국면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도덕자본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도덕자본을 가장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어쩌면 대중은 통일과 전환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희생을 대변할 도덕

적 인물을 찾을지도 모른다. 자신이 경험했던 희생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도덕적·물질적 보상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집단을 요구할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통일 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무기력을 정화시키거나 도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권력’을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릇 인간은 ‘도덕적’ 위선의 짙은 장막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홍민** .....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동국대 SSK 분단/탈분단 행위자-네트워크 연구단 연구교수, 동국대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연구위원

저서: (공저)『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공저)『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서울: 통일연구원, 2010), (공저)『Fact-Finding Study on Human Right Violations against North Korea Women in the Process of Flight and Settlement』(Seoul: 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Korea, 2009), (공저)『현시기 북한의 경제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서울: 진보정치연구소, 2007).